

KEF 경총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2020. 12. 16

< 조사개요 >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국내 654개 기업(응답 기준)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조사한 결과임.

1 응답 기업의 90.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반대」

-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강은미 의원, 박주민 의원 발의)」에 대해 응답 기업의 90.9%가 제정에 '반대'한다고 응답함.

< 그림 1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대한 기업 입장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및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경영책임자·법인 처벌수준 「과도」, 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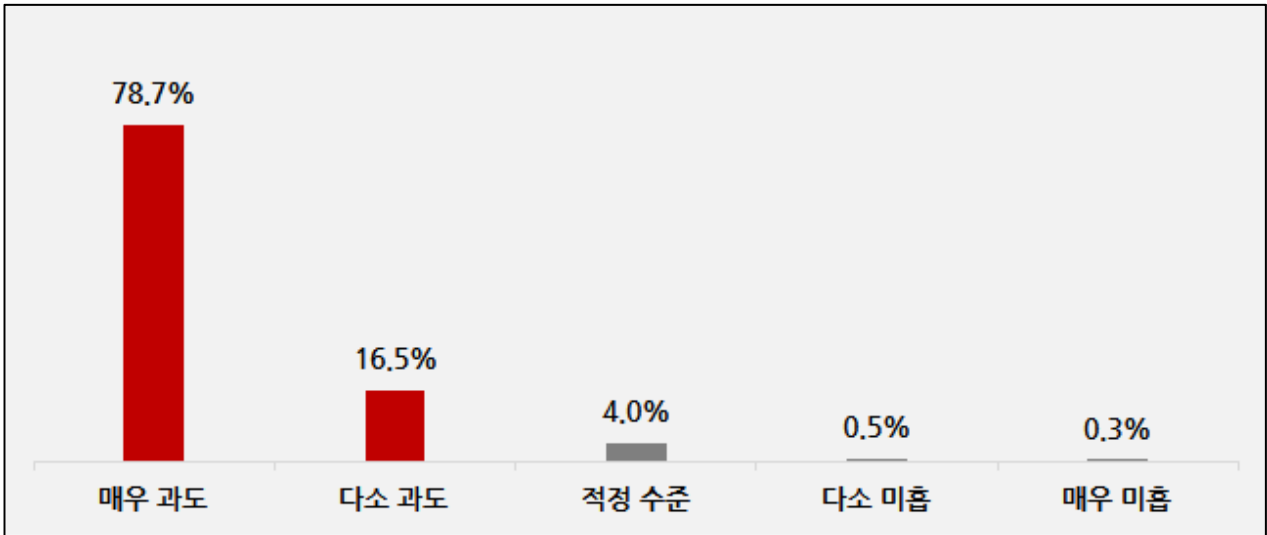
- 사망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따른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이하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수준*에 대해 응답 기업의 95.2%가 '과도'하다고 응답함.

* 사업주, 경영책임자 : 강은미 의원안(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 박주민 의원안(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법인 :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의무 소홀을 지시한 경우 매출액 10% 이하의 벌금 가중(2개 의원안 동일)

- '매우 과도'하다는 답변이 78.7%로 가장 높았고,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도 16.5%로 나타남.

< 그림 2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처벌수준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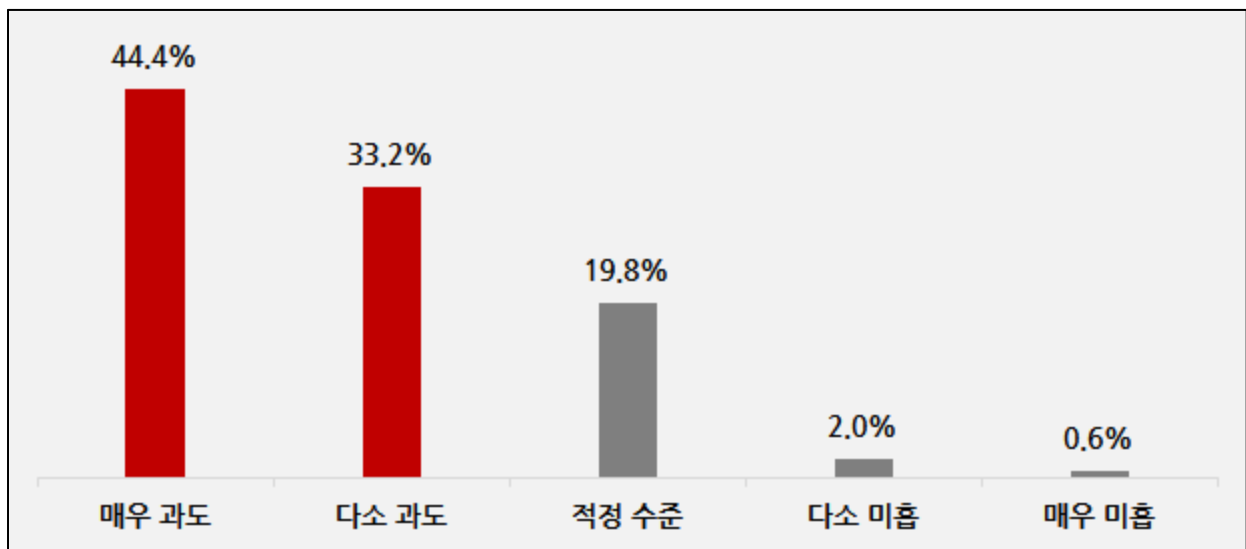


□ 한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법인에 대한 처벌 수준*에 대해서도 응답 기업의 77.6%가 '과도'하다고 응답함.

* 사업주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 10억원 이하 벌금

○ '매우 과도'하다는 답변이 44.4%,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이 33.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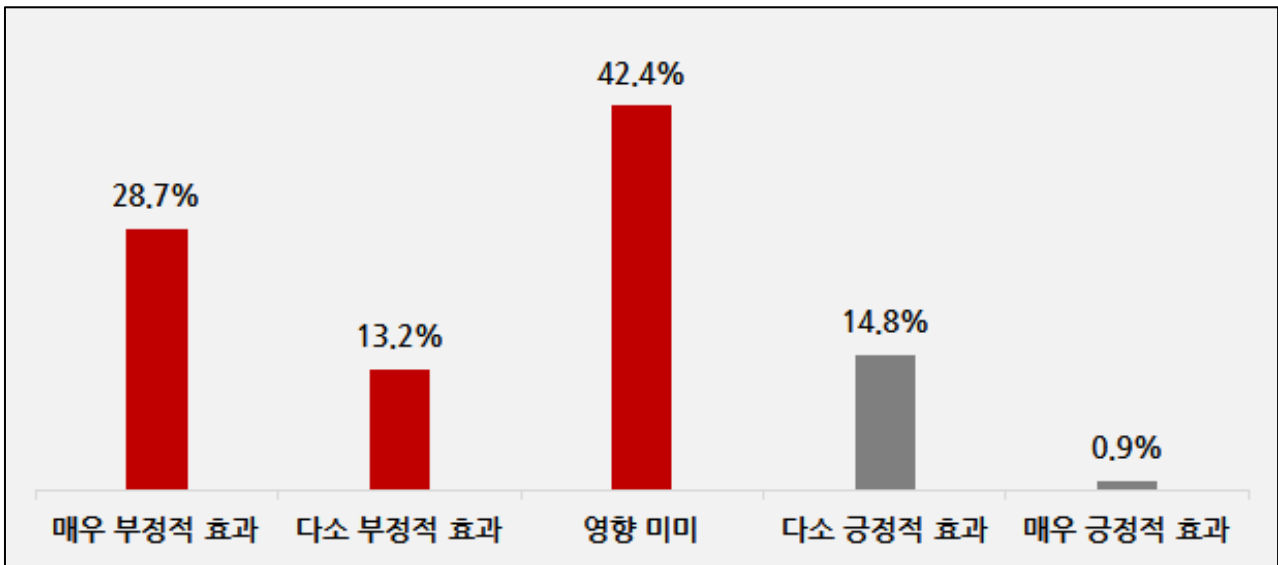
< 그림 3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법인에 대한 처벌수준에 대한 의견



3 처벌 강화만으로는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 없거나 영향 미미」

-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 강화가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 기업의 84.3%가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없거나 영향이 미미'하다고 응답함.
- '영향이 미미'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42.4%로 가장 높았고, '매우 부정적 효과' 28.7%, '다소 부정적 효과' 13.2% 순으로 나타남.

< 그림 4 >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 강화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의 효과성



4 처벌 강화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 받아

-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강화시 상대적으로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군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89.4%가 '중소기업'이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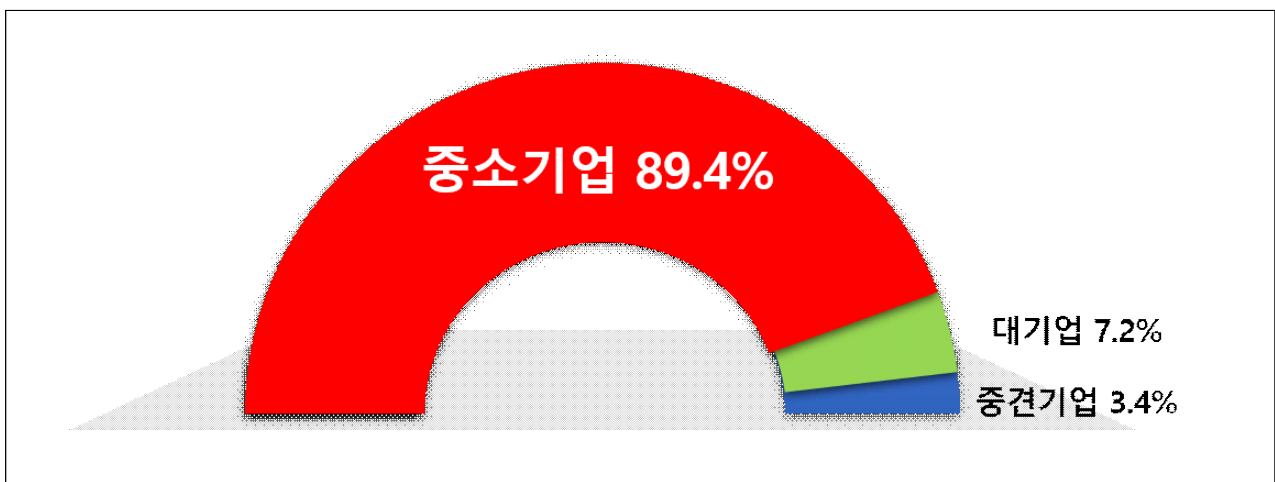
※ '대기업' 은 7.2%, '중견기업' 은 3.4%로 응답

- 이는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4억112만원*에 불과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시행 이후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과도한 처벌로 인해 사업자체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2018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본통계

- 현재 발의된 제정안의 경우 법인 처벌시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 매출액 10% 이하 벌금 가중, 영업허가 취소·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 발생 시 중소기업은 최소 벌금인 1억원 만으로도 사업의 지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산재보상과는 별개로 피해자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강은미 의원안), 5배 이상(박주민 의원안) 배상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업주에게 부과 되어 있어 법정 공방시 이를 대응하기 위한 법률비용 부담 우려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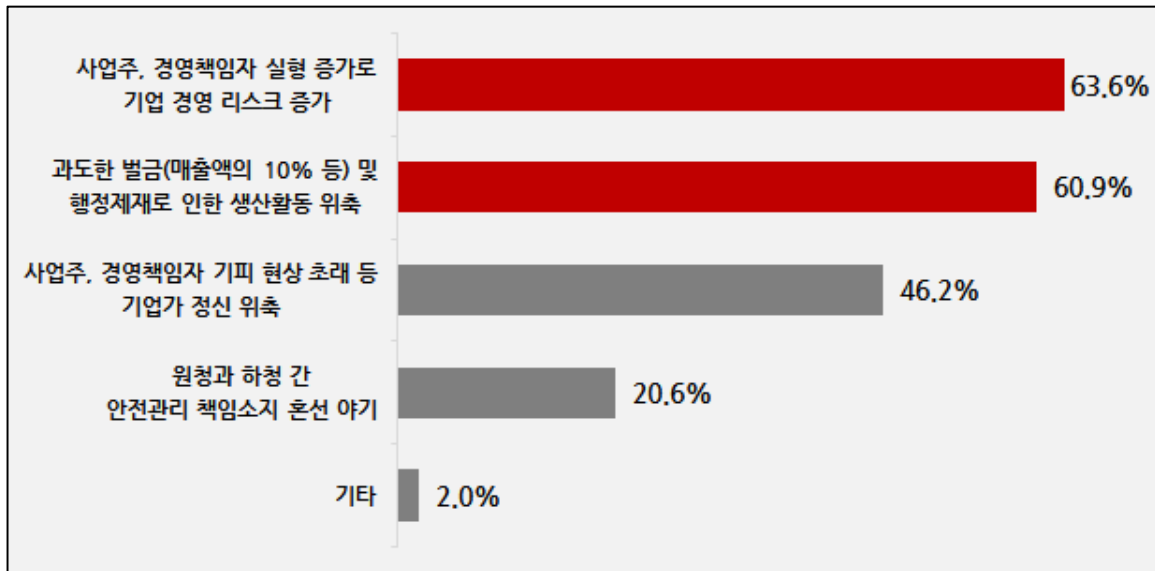
< 그림 5 > 사업주 등 처벌시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군



5 처벌 강화 시 「실형 증가로 경영 리스크 증가」와 「과도한 벌금 및 행정제재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을 가장 우려

- 처벌 강화시 응답 기업의 63.6%가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 60.9%가 ‘과도한 벌금 및 행정제재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것으로 응답함.
- 그 외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피 현상 초래 등 기업가 정신 위축’ 46.2%, ‘원청과 하청간 안전관리 책임소지 혼선 야기’ 20.6%, ‘기타’ 2.0% 순으로 나타남.

< 그림 6 > 사업주 등 처벌 강화 시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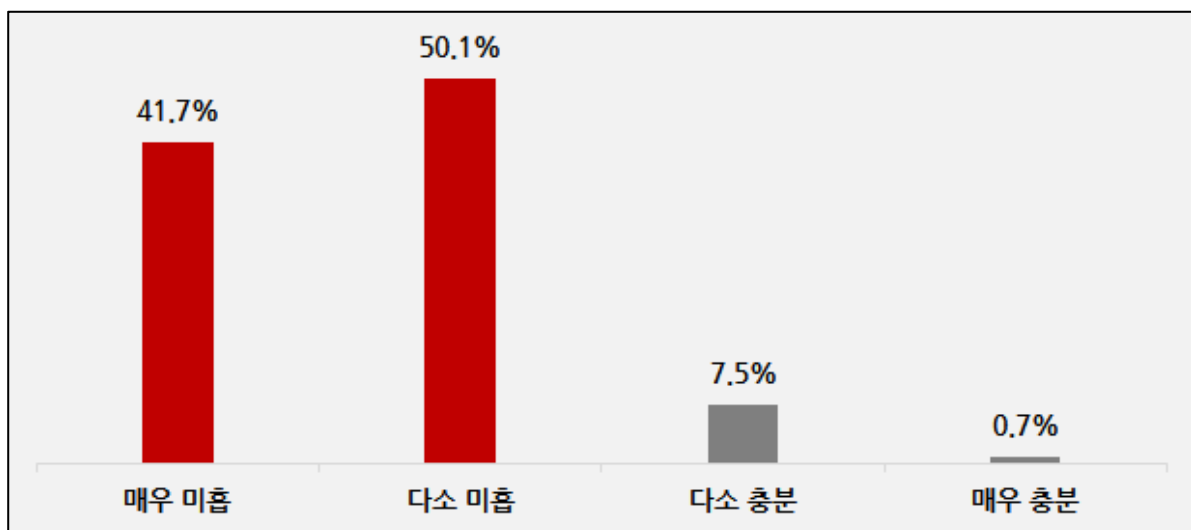
※ 2개 복수응답 가능, 각 항목 비중의 합이 100을 초과

6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준 「미흡」, 91.8%

□ 기업의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준에 대한 질문에 응답 기업의 91.8%가 '미흡'하다고 응답함.

○ '매우 미흡' 41.7%, '다소 미흡'이 50.1%로 집계되었으며, 반면 '충분'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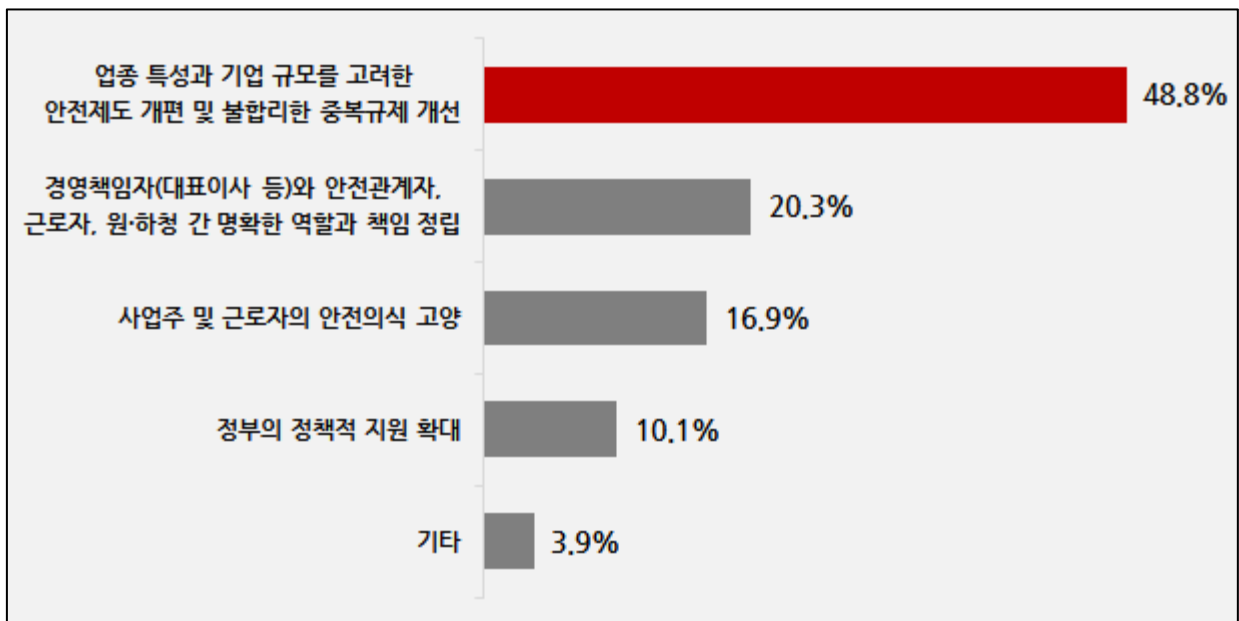
< 그림 7 > 기업의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이 선결과제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48.8%가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그 외 ‘경영책임자와 안전관계자, 근로자, 원·하청 간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 20.3%,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양’ 16.9%,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 10.1%, ‘기타’ 3.9% 순으로 나타남.

< 그림 8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강은미 의원, 박주민 의원 발의)」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조사·분석하고, 기업이 산업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산업 경쟁력 저하를 유발하지 않는 정책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조사대상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회원사를 포함한 국내 기업 중 설문에 응답한 654개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3. 조사기간 : 2020년 11월 23일 ~ 11월 26일 < 4일간 >

4. 조사방법

팩스와 이메일을 통한 자계식 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였음.

5. 주요 조사항목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기업 입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 경영책임자·법인에 대한 처벌수준의 적정성
-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처벌 강화시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개선방안 등

6. 회수설문 수 : 총 654개 기업

<끝.>